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공일자 | 2014. 4. 29.         | 담당자 |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                     |
| 홍보담당 | 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 | 연락처 | 02-3775-9013, 010-2394-6630 총2매 |

## 제목 : 특수직역연금의 저부담 · 고급여체계 , 근본적 개혁 필요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『일본의 연금제도 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계간 보험동향 2014년 봄호 테마진단).
-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가재정의 압박과 공적연금 제도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최근 일본은 전면적인 공적연금개혁을 추진함.
  - 2012년 이전에는 연금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, 연금급부 인하 등과 같 이 보험료와 급부수준을 조정하는 부분적 연금개혁이 대부분임.
  - 2012년 이후 사회보장비 지출 증대에 따른 연금재정 악화로 국채발행 이 증가되면서 개혁방향을 전면적 개혁중심으로 전환함.
  - 즉 우리나라의 특수직역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의 급부수준을 국민연금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함으로써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으로 통합함.
-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연금급부를 추가로 지급하고 단기간 근로자를 후생연금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취약계층중심의 제도 개선도 이루어짐.
  -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후생연금(소득비례연금)과 최저보장연금을 조합시킨 연금제도 도입을 장기적인 개혁과제로 선정함.

○ 또한 영세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단기간 근로자 및 주부에게 연금세제 혜택을 보다 많이 부여한 미국식 IRA 제도를 추진함.

□ 최근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됨.

○ 연기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특별법인세 폐지를 검토하고 확정각출연금의 각출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짐.

□ 일본의 고령화 추세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, 일본의 연금개혁 동향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.

○ 국채발행 등 차입예산을 통해 연금재원을 확보하는 일본 전철을 답습하지 않도록 연금개혁의 기본틀이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사전에 마련될 필요

- 공사연금간의 역할 분담차원에서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연금개혁 로드맵이 종합적으로 제시될 필요

-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악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의 저부담·고급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혁방안을 모색할 필요

- 노후소득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취약계층 중심의 제도 개선책이 강구될 필요

첨부 : 테마진단 “일본의 연금제도 개혁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”. 끝.